

야당, 김건희 여사·명태군씨 국감 증인 단독 의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30명 채택 오는 31일·내달 1일 비서실 등 국감 민주, 상설특검 규칙안도 소위 회부 국힘 “野 요청 증인만 일방 처리”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군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채택된 국감 증인은 모두 30명이다.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군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이다.



배준영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계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중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이밖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살피려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35명의 증인 중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경호처 수행 부장, 검사까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명단을 보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 단독으로 규칙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함으로써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발의된 규칙 개정안은 여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제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문수 “고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삭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16일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전신본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기술한 용어가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군’, ‘반군’ 등으로 왜곡 표현된 단구들이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



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2025학년도 3월,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왜곡된 표현 없는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전신본 단계에서 수정된 점은 적절한 조치”라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광주시당 “오월 왜곡 김광동 위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을 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 사퇴·사퇴를 촉구했다.

16일 광주시당은 보도문을 통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과거사 인식에 대한 김성희 의원의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날은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날이다. 한날에 펼쳐진 각기 다른 이 두 장

면은 우리에게 희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 났다. 이제는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5·18을 거짓 선동하는 자들에게 단호히 단죄 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오월영령과 광주시민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인사를 즉각 파면하고 5·18헌법전문 수록 등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성현 기자

정부 “북한군 ‘우크라 파병’ 동향 주시… 세계 평화 위협”

정부는 16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러북 간 군사협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러북 간 군사협력이 무기 거래뿐 아니라 무기 생산 및 군 인력 파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인해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대대급 부대 편성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대대는 최대 3000명의 북한군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뉴스스

민주,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전망에 “검찰 해체가 답”

박찬대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전망이 나오자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없애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검찰 해체가 답”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무혐의 처분하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국민께서 박수 치셨나”라며 “이 정도면 검찰이 특검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개입과 선거개입 의혹도, 세관 마약수사 의혹도 그 외의 모든 의혹들도 검찰에 맡겨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남편 오빠’면 바보, ‘친오빠’면 농단”

“김 여사 직접 답하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명태군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메시지 대화에서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신속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 여사가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커지고 정권의 몰락은 앞당겨질 뿐”이라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수순 밝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자폭이 될 것”이라며 “검찰 지도부는 모든 일의 책임과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며 무덤 깔조차 쓰지 않는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하고 비겁한 검찰에게는 해체만이 답이라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가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는 이르면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은 두 번째 국민 퀴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된다”며 “일단 챗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철없는 오빠 위에서 날뛰는 비선 실세들의 현정 질서 유린,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없다”며 “국민들은 이 막장 드라마가 하루라도 빨리 종방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하다”며 “봉숭아학당이나. 바로 들롱날 역대급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명태군씨는 이날 김 여사와 나는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가 2000장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자신이 공개한 내용 중 김 여사가 지목하는 ‘오빠’에 대해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갈무리가)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내가 그 여사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면 또 뒤집어질 거다. 진짜 충격 받을 건데”라고 말했다.

명씨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자신간 대화를 사적대화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공적 통화, 대통령하고 한 걸 가까 되겠네”라고 되받았다.

서울=김선욱 기자